

014/200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설계와 의도 파악부터

시력문제, 초등학교도 시간만 있어도 푸는 문제 내서 뭐할라고?
세부 내용 일치 문제 아니라 했음..
제발. 백분위 96 근처도 못 감. 스스로 인생 조지지 말자.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정보 후 처리가 필요하겠구나!
표 그려야 겠구나! 판단해야지!
딱 봐도 비교-대조- 그런데 동일, 모두, 모두, 모두... 전부다 공통 점 찾으라는거네? 그러네? 생각해보니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근거			
범위			
주체			
종류/분류			
절차			

이 구조로 처리가 되었네?
구조 처리 하면 되겠구나! 해야겠나요?
아니면
이걸 하나 하나 발췌독.....

능지가...
학습센스가...
공부머리가...
네... 안 말합니다.
아니 못 말합니다...
하고 싶음 해야지 뭐.

아 잠만... 근데 선지 설계가 5번만 뭔가 다른데? 나머지는 표그려 세부내용같은데..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응? 주젠데?? 에이 설마... 정답??... 정답!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ex) 드론, 전동킥보드

2. P 3권 분립 문제 -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

수도 없이 수업에서 말했죠?
주제 + 구조 집중하라고.
쓸데 없는 정보가지 낮은데 어그로 노노노 제발 좀
여러분 인생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휘둘릴거임?
정보처리도 마찬가지로.
Big data 시대, 가짜 정보, 정보가치 낮은 거 어그로 끌리다보면?
네... 개화기 멸망한 조선 된다... 상투 안 짜르고 버티면?
개화 안 하고, 계몽 안 하면?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잠깐만...
'근거⇒범위' 이게 제일 정보량 많은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니!
역시 이걸 문네!
그럼 표그리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바로 정답같은데? 2단락에서 '근거'만 4번을 말했으니... 거의 60~70% 정답 같은데? 발췌독 하면...정답이네?!
심지어 법 지문 구조 특징 P-S 구조도 있네?
P : 근거(법률) ⇨ 범위. 이 원칙 어겨서 넘기면?
S : 효력 없음 ㉠

주제 구조 잡으라 했습니다.
정보가치 판단, 높은 것에 집중하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걸 이해.능지.공부센스.공부머리의 문제가 아님.

그냥 습관의 문제임.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 털어달라고? 왜?

아무리 봐도 1번 정답인데, 수학 문제 풀다가 정답이 34 나와서 5번 선지 골라놓고 나머지 선지 정답 아닌 이유 찾아요?

아... 정답 못 고르는 경우 생길까봐?

애초에 지문 제대로 정보처리 할 생각을 하는게 맞지 않냐?

왜 꼭 80분에 안 될,

혹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서,

익숙한 점수 받을라고 해?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애도 세부내용???

아니라고!



1) 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ljmg8uurAA> ('넌씨눈'구글검색함... 중요한 거 아님.)

이쯤되면 좀...

딱 봐도,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세부내용 털기 전에 주제 줌.

딱 봐, 선지 다시 봐!

근거 법률 ⇨ 위임 범위

이거 찾아 봐.

5번 좀혀지네? 이거 좀히고 발췌독 ㄱ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 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찾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④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하면 당연히 동공 지진 오지...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 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위임명령과 같은지 확인해야 하니 이제 2단락으로 가서서 발췌독?

숨은 단어 찾으세요??

수능이 숨은 단어 찾기 문제임?

수능이 시력 문제임?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㉕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군침이안도노...



언제 찾을래? 80분 안에?? 되심??? 6평 9평 안 쳤어?????

여기서 시간이 지연된다?

발췌독... 정보량 터지고 시험 던지고 싶어진다?

응. 딱 봐도 정보 후처리 필요하다.

표 그려라.

왜 던지냐... 방법이 많은데!

	2단락 위임명령	3단락 행정규칙		4단락 조례
상위 근거	헌법	행정부직제 사무처리절차	P 위임명령 한계 +	지역 특수성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없음	국회 위임 근거 주제 유형 미지정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비교대조	포괄적 위임 불가			포괄적 위임 가능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X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법률 위임 없이 제정 가능	↓	어구 범위 제한
주체	대통령 총리 부			지방 의회
종류/분류	령 령 령	고시 예규	고시 예규	
절차	입법예고 공포	없음	없음	입법예고 공포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	↑ 국민적용 X		

자 5번 선지 판단해 봐..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응...

발췌독 해도, 표 그려도 안 되냐?

왜일까?

왜겠어요?

출제자 의도 사고 흐름이 아니니까!

배웠잖아요... 매 수업에서...

주제+구조 딱 집중.

주제 : 행정입법

구조 : 비교 대조...아!

공통점이 있긴 해?

제일 중요한 '근거'를 봅시다.

그러네!

국회 위임 법률에 근거해서 2단락 / 4단락이 만들어지는 반면 3단락은 국회 위임 법률 근거가 없거나, 국회 위임 법률이 뭔가 부족할 때 해결 방법으로 쓰는 거네! 그럼? 당연히 차이점. 다르네!

아... 구조 뺏세게 잡을 걸...

주제 뺏세게 집중할 걸...

즉,

① 지문 정보 처리할 때

② 문제 들어와서 발췌독 할 때

③ 정보 후 처리 표 그릴 때

3번이나 기회가 있었어.

주제 구조 집중하라는!

이러면 혼 나야지 뭐...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3단락 주제. 행정규칙 근거 법률 없음 맞음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단락 세부내용. 하지만 역시 구조 잡으면,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근거 법률 필요 없음. 잉? 이것도 '근거' 정보가치 높은 내용으로 털리네?!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C 일반 국민 적용 안 됨 ⇨ E 절차 없음 최소한 구조 뺏세게 잡았음 역시 보이겠네? 정보가 분산이 안 되네?

① ⇨ ② ⇨ ③ 사고 흐름이 있네!

㉔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㉕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2단락 위임명령	4단락 조례
근거 법률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국회 위임 근거 법률 ↓
범위	제정사항 (범위)정해짐 어구 범위	어구 범위 제한
국민적용 여부	↑ 국민적용 ○	?

알 수 없는데? 정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실??
아니아니.

세부 내용.

처리 불가 정보.

완결성 없는 정보 이므로 나

물론, 추론하면,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의회이니
해당 지방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준수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그런 추론과 그 추론을 위한 충분한 정보 처리 후 필요한 정보만 끌어와서 판단? 실전에서? 안 된다니까... 네. 되면 하세요... 하시던 대로... 진즉 1등급 백분위 100 나왔지..

① ㉔의 제3조의 내용에서 ㉕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3조의 구체내용은 16조에서 확인!

② ㉕의 제5조는 ㉔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위임명령 5조의 근거는 법률 3조!
역시! 좁히니까 보이는 세부 내용!
아시겠어요?

세부 내용도 결국에는

주제-구조-정보가치 좁히는 것에서 시작!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1-9평)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 능숙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도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절차**

도입부의 의도와 설계를 봅시다.
 행정규제, 근거는 국회법률.
 구조 잡고,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세요
 근거? 아니라? 반복되는 말은? +하향식...아!
 원칙 : 삼권분립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 왜지??
 드론? 예시같고...아! 왜-이유!
 C1, C2, C3+하향식...아!
 역시 1끝-2첫 T.S
 법률지문 - 하향식 필수!
 역시 1끝-2첫 T.S 3가지!
 PS 3권분립 위배. 헌법근거로 해소!

근거
주체
분류
절차
정당화 = 근거
근거 ⇨ 범위 확정 원칙
P : 근거-범위 넘으면 문제겠군!
예측? 아마 근거 ⇨ 범위 ⇨ 예측

그런데
P 1단락+6평 ICT 상황은?
S 범위를 좀 더 넓혀주면 해결!

다시 문제 P 범위가 넓으면? 어구 의미 범위 침범은?
S 효력 없음!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 정보 중 가장 정보가치슈!

분류
절차
법률위임. 즉, 근거법률 없음?
역시, 근거와 범위가 중요!
그러나? 뒷 내용이 잘 안잡힘...
해결은 구조로! 역시, 법 지문!구조 예외!
6평-1단락-2단락 내용 동일인데?
그렇다면
P.C : ICT슈 대응 필요
E.S : 범위 넓혀줌!
이게 또 하나의 주제겠군!

근거
주체
계속 반복되는 말이...
결국 근거? 어구 의미?
역시 근거 ⇨ 범위가 중요하군!
결국 근거/범위가 많은 분량 =2단락+4단락 가장 정보가치슈!

6평... 기출 연계!
 P : ICT 기업 S : 디지털세
 P : 드론같이 ICT 변화
 C1, C2, C3의 상황 대처?
 S : 국회(입법부) < 행정부!
 그러면 문제는?
 P : 원칙인 삼권분립 위배!
 그러면 이어지는 흐름은 그 설명?!

주제 정리
 1. 기출 연계 6평에서 이어지는
 C 과학기술 발달 + 사회변화
 E.P 입법부 적용 어려움
 ex) 드론, 전동킥보드
 S 행정부가 입법부 역할 대신!
 2.
 P 3권 분립 문제
 S 헌법-국회 법률 근거 하면 됨!